

북·중 정상회담 평가와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통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5.3~7)과 북·중 정상회담(5.5~6)이 있었다. 이 회담은 북한 내부적으로는 화폐개혁의 후유증 속에 민생경제 침체와 식량난이 심화되어 있고, 남북관계는 천안함 침몰사건(3.26)의 ‘북한행동론’ 및 북한의 금강산 남측민간자산 동결조치(4.29) 등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1년 6개월 이상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중 정상회담(4.30) 직후 우리에게서는 사전 통보도 없이 북·중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공분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비밀리에 추진된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북한은 경제난 해소와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체제내구력 강화에, 중국은 지역패권국가로서의 위상 제고에 주력하려 했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4~5월 춘궁기에 군량미 창고까지 개방한 상황에서 화폐개혁(2009.11)이후 부족한 식량과 물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의존도가 75%가 넘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다. 정치적 차원에서도 방중과정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건재를 국내·외적으로 과시하고 후계체제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었고, 안보 차원에서도 천안함 관련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완충적 역할이 필요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적 행태를 자제시키고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6자회담에 복귀시킬 수 있게 될 경우,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및 주변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양국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겠다. 동맹관계를 국제사회에 과시했다는 점에서는 성공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만족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이번 회담을 통해 북·중 ‘혈맹 관계’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우호관계 대대손손 계승’이라는 표현을 통해 후계체제 구축문제에 대한 중국의 묵시적 동의도 받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절박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대규모 무상지원과 경제협력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점은 실패라 하겠다. 중국의 경우, 4년 4개월 만에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최고의 의전을 베풀며 환대하는 모습이였다. 중국 최고지도부 대부분(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이 역할 분담을 통해 영접(리커창 부총리), 정상회담(후진타오 국가주석, 시진핑 국가부주석) 및 만찬(리장춘 상무위원 등), 양자회담(우방귀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자바오 총리), 산업시찰 동행, 환송(후진타오 주석, 자칭린 정치협상 주석)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회담결과를 살펴보면 양국 사이에 미묘한 마찰과 갈등도 엿볼 수 있다. 후 주석은 덕담의 환영사를 마친 뒤, “5개 분야 협력을 건의하고 싶다”며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고위층 교류지속, 전략적 소통강화, 경제무역 협력심화, 인문교류 확대, 국제·지역 협력강화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사항이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다. 그는 “양국은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양국 내정·외교에서의 중대문제와 국제·지역 정세, 당·국가 통치경험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소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0년대 이래 상호내정불간섭 등 평화공존 5원칙을 대외정책 기본방침으로 지속해 온 중국이 금기를 깨고 북한의 내정과 외교상 중대한 문제는 미리 알려 줄 것과 당·국가 통치경험을 소통하자고 요구한 것은 매우 강한 요구다. 물론 북·중간에는 ‘상호 협의 및 통보제’가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61.7.11) 제4조(“체약 쌍방은 양국의 공동 리익과 관련되는 일체 중요한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계속 협의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국제문제에 국한되었던 ‘통보제’였다. ‘내정문제’에 대해서는 불간섭할 것과 ‘사회주의 건설사업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가능한 모든 경제적 기술적 원조를 제공할 것을 제5조에 규정함으로써 ‘통보제’의 한계를 분명히 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한계를 넘는 모습을 중국이 보여주었다. 북한의 제1·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일방적 화폐개혁과 개혁·개방 없는 수구적 사회주의경제체제로의 전면 복귀 등에 대한 반발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원자바오 총리 또한 과거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사용하지 않던 ‘개혁·개방’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전과 다름없이 중국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지지할 것”이라며 부드럽게 말하되, 이를 위해 “중국의 개혁·개방 건설의 경험을 소개하고 싶다”고 중국측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중국 기업의 북한 투자를 환영한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변경지역 기초시설 건설의 속도를 높여 나갈” 것과 “새로운 협력분야와 협력방식에 대해 연구토론하자”며 북한의 인프라와 제도 개선 없이 대북투자 확대가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결국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적 지원과 투자유치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반도 영향력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북한의 대중 경제·정치적 의존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6자회담 복원과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남한에 대해서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통해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 복귀선언을 확실히 끌어내지 못한 것은 그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뜬금없이 북한이 핵융합반응에 성공했다고 주장(5.12)하는 것은 바로 이번 정상회담과 국제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차 방중(2006.1) 이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2006.7.5)와 1차 핵실험(2006.10.9)을 단행한 것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원자폭탄 뿐 만 아니라 수소폭탄도 개발하고 있으니, 알아서 대응하라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경술국치 100년, 한국전쟁 발발 60년인 금년도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길로 가야할 것인가? 냉전시대 유물인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의 이중 삼각대립구도로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에 대한 미·중 영향력 확대경쟁 구도와 천안함의 분노와 슬픔을 극복하고 민족고난과 분단의 역사를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첫째, 기본을 분명히 하고, 점점 높아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풀어가야 할 민족문제인 동시에 주변4국의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국제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와 대남전략만 유념할 것이 아니라, 주변4국과 한반도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균형감각 있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택한지 20년이 넘었을지라도 ‘21세기 사회주의 대국’을 꿈꾸는 공산주의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한국전쟁 발발한 지 60년이나 되었지만, 중국은 그때도 북한과 한편이 되어 싸웠고 지금도 그와 같은 입장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국의 최우선 관심이 북한의 핵무기문제와 인권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정적 발전에 있음과 이를 위해 역내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향후 세계 2위의 경제



력과 2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더 크게 다가올 중국의 정치·군사·외교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 평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되,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이 도발한 것으로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는 동시에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의 하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 정책공조와 한중 협력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그러나 밝혀지지 않을 경우, 세계 영향력 유지 및 주변정세 안정화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관리하는 미·중 양국은 전략적 판단 및 대화를 할 것이고 북·미 양자대화가 재개되며 6자 예비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마냥 반대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상황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을 승화시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가면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 4월 29일 및 5월 11일 2회에 걸쳐 힐러리 국무장관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이 전화로 천안함 사건 및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5.24~25일 미·중 경제전략 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6자회담 재개문제와 천안함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2005년 이후 미국과 중국 간에 북한의 장래와 한반도의 미래가 협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다. 100년 전 태프트·가쓰라(Taft-Katsura) 미·일 밀약(1905.7.29), 제2차 영·일 동맹(1905.8.12), 러·일 조약(1905.9.5) 등 우리를 제외한 강대국간 논의를 우리는 모른 채 을사늑약(1905.11.17)을 강제로 당하고, 끝내 경술국치(1910.8.29)를 맞이한 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와신상담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천안함사건 책임과 관련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응징·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갖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유념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한반도 전쟁이 일어 나야 남북한 모두 정신 차리고 공존·상생의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민족공멸의 길로 전락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탈남·향중(脫南向中)’했던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계를 다시 느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다시 ‘향남·연중·화미(向南聯中和美)’의 방향으로 북한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지금은 차갑고 냉정하게 천안함 문제와 북·중 관계에 대처하면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국가대 전략을 치밀하게 구상해서 우보호시(牛步虎視)의 자세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눈물로 평화와 통일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